



환경관리공단,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결의대회 가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2007년에 추진 중인 22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자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단은 정부 시책에 따라 2006년도 22개 사업의 금년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협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기구인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평가대상 22개 사업 중 평가완료된 12개 사업의 평균 낙찰율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이는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의 88.0% 보다 16.4% 낮은 낙찰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낮은 낙찰율에 대비, 공사의 적정품질

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시 철저한 설계검토와 공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외부청탁 등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당일 새벽(04시) 공단 감사실 및 사업신청자의 입회하에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고, ▲주무관청의 공무원은 “공익성 및 정부지급금” 분야의 평가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동일기관의 평가위원은 1인으로 제한하고,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은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하여 중복평가를 지양하였다.

한편, 공단은 22개 사업 중 아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남아 있는 10개 사업의 컨소시엄 주간사 대표자와의 다짐대회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BTL)의 정부 정책 방향과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 의지를 표명 하였으며,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탁 등을 배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06년도 사업을 금년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협상 및 공사착공 등)를 요청하였다.



2011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확대

2011년부터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이 현행 BOD에서 총인(T-P)까지 확대되고, 현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전율 적용이 배제되어 안전부하량을 개발계획 할당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계별(낙동강, 금강, 영산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자치단체 및 수계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별·지자치별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할당)량을 지정·관리하는 제도

-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지역 개발물량은 늘어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선진적, 과학적 물관리 정책 수단

○ 1999~2002년 동안 4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시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수변구역 제도 등과 함께 도입

- 2004~2010년 동안 제1단계 오염총량제를 시행중으로 현재 3대강수계 38개 시·군에서 시행중, 향후 5년 단위로 시행 예정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은 3대강 수계별로 공청회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은 BOD 및 총인(T-P)을 전수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금강수계는 BOD는 전수계에, 총인(T-P)은 대청호 및 대청호 상류지역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환경부는 부영양화의 지표인 총인(T-P)를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함으로써 호소 부영양화 관리와 녹조발생으로 인한 BOD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단위유역(3대강 수계 96개)별 오염 배출량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을 계산하고 목표년도의 오염배출량이 할당부하량이내가 되도록 삭감계획을 수립 관리

○ 지역개발 사업은 별도로 할당하여 관리

○ 제2단계(2011~2015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2008~2009년중 수립, 시행계획은 2010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

아울러, 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지역개발 할당량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오염부하량 할당시 일률적으로 할당량에서 제외하던 안전율(10%)을 적용배제, 지역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수질 초과지역과 차등관리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제2단계(2011~2015년)에 적용할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2007)에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2008~2010년중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자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기술개발에 443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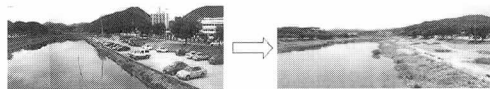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및 “2007년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청정사업’)은 “제품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오염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고,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에너지·자원순환사업’)은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원부자재 투입의 원천적 절감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청정사업에서 에너지·자원순환과 관련된 과제를 분리하여, 에너지및자원순환특별회계에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동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홍수방지·환경보전 병행 위해 1조2,500억 투자

건설교통부는 홍수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 하천정비 사업에 금년 중 1조2,5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740km(692개소)에 달하는 수해상습 지구의 홍수위험을 제거할 계획이다.(하천사업비 : 1997년 3,220억원 → 2007년 12,500억원 -10년 동안 4배 증가)

또 홍수방지사업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환경도 보전한다. 예를 들어, 하천 내 인공시설물(주차장)을 철거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장마철에는 홍수가 흘러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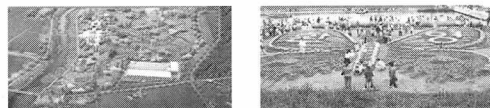
<주차장 철거 전> <주차장 철거 후>

하천의 제방은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보호하고 완만한 경사로 만들어서 튼튼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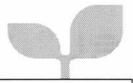
<친환경 제방 사례>

함평군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함평천에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대전, 구미 등 전국 26개소로 확대된다.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사업은 홍수방지, 환경보전, 지역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평천에 나비생태계 복원 ⇒ 함평군을 나비관광도시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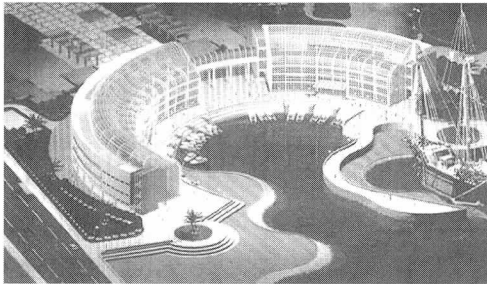
건설교통부는 금년부터 댐이 위치한 하천을 아름다운 호수를 활용한 홍수에 안전한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32개 댐이 위치한 하천에 대하여 중장기 투자계획(2007~2011, 3,000억원)을 마련한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체 소요예산의 40%(1,200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댐에서 얻은 수익금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부산 동삼동에 해양박물관 건립

부산해양박물관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내에 15천평의 부지에 연건평 7천평 규모로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립해양박물관 조감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를 접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방식에 따라 올해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한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박물관은 실내 및 옥외 전시실, 전당대, 보존선, 친수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해양역사·

영토·산업·선박·생물·과학·문화 등을 주제로 전시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관람 보조 설비를 갖추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사라져 가는 해양 유물·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열린 해양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起燮)은 지난 2월 13일(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이하 지속위)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상호간 역할과 비전을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공단은 지속위 전문가들로부터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받아 각종 사업에 반영하고, 지속위는 공단으로부터 시책현장 정보를 제공받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정책협의회를 반기 1회 개최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위 전문가를 활용한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공단을 지속가능발전 전략 실행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방안 등 에너지·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